

전주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총력전

금융위 지정 평가방안 확정 따른 세부 대응 전략 마련…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TFT 중심 금융생태계 구축 나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전주시가 최종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제3금융중심지' 최종 지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과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올해 3~4분기 중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며, 연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완벽한 '원팀(One-team)'을 이뤄 합동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국제금융센터를 포함한 금융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늘어나는 금융기관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적 지원에 집중기로 했다.

또한 시는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종합금융)과 부산(해양선박·파생금융)의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전북만의 강점인 '자산운용 및 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 특화' 비전이 평가위원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산

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상반기에만 정복혁신도시에 △산한금융그룹의 금융허브 △KB금융그룹의 금융타운 △우리금융그룹의 우리w(우)금융타운이 연이어 출범하며 4대 금융지주의 거점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산운용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TFT를 중심으로 금융기업 유치 및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내실있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 관련 전문가들과 10회에 걸친 릴레이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다.

여기에 시는 국내의 주요 금융기관

유치 및 관련 사무소 개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니포럼' 등 글로벌 금융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또, 지역 맞춤형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한 필수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대응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정치권 및 금융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선정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범시민 공감대를 확고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는 행정·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주시 27개 부서 공무원 45명과 전주대학교 교수·시분야 기업 전문가,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멘토단 11명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AX(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이 AI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 AI 대전환’ 본격 시동

전주시 AX 추진단, AI 교육으로 활동 시작

전주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민원서비스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행정·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주시 27개 부서 공무원 45명과 전주대학교 교수·AI분야 기업 전문가,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멘토단 11명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AX(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전주시 AX 추진단은 이날 AI 교육을 받는 것으로 'AI 특별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AX 전환' 업

무협약을 체결한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먼저 2주간 AI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전문가 멘토를 중심으로 행정 분야별 그룹을 편성하고, 8주간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AX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굴한 우수 AX 프로젝트를 전 부서에 확산 적용해 AI 활용 경험을 확대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 개발로 이어지는 교육-실행-확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만호 기자

‘K-패스 이용 확산’ 전주시민 교통비 환급 ↑

상반기 K-패스 환급액 12억3000만원… 지난해 연간 환급액 1.5배

지난 상반기 전주시민이 K-패스를 통해 돌려받은 교통비가 총 12억 3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주시민의 연간 환급액 규모의 약 1.5배 수준으로, K-패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교통비 절감 혜택도 크게 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5895명이었던 K-패스 월 환급 인원이 지난 6월에는 1만44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지난 상반기 총 환급 규모도 총 12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K-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받는 시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1만 3638명이었던 전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지난 6월 말 2만 5201명으로 증가해 반년 만에 1만 명 이상 늘었다.

K-패스'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춰

주는 제도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일반·청년·다자녀·노인·저소득층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정률 환급 방식인 '기본형'에 더해 정액형 '모두의카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한층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 패턴과 이용자 유형에 맞춰 보다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돼 시민들이 자신의 대중교통 이용 형태에 맞는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고유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더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고유가 대응 K-패스 환급을 한시 상향은 오는 9월까지 적용되며, 10월부터는 기존 환급 체계로 전환된다.

시는 한시 상향 기간 중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K-패스 이용 방법과 환급 혜택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K-패스 가입과 이용 현황, 환급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역 택시 승하차장 이전·승용차 전용 회차구역 신설

전주역 택시 승하차장이 역사 우측으로 이전되고, 승용차 이용객을 위한 전용 회차구역도 새롭게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주역사 개선사업 중 좌측구역 공사 일정에 맞춰 기존 역사 좌측에 위치했던 택시 승하차장을 역사 우측으로 이전하고, 택시 정차·대기 공간도 기존의 약 2배인 80여 대 규모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역사 전면 승용차 전용 회차구역도 택시 출입 동선과 분리함으로써 철도 이용객의 승하차 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택시와 승용차 이용 구역이 분리되면서 차량 동선이 단

순해지고, 역사 전면의 교통 흐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도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승용차 전용 회차구역에 '이지콜' 등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별도 승하차 공간을 명확히 표시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전주역사 후면주차장 382면이 새롭게 조성됐고 전주역 후면 선상통로가 연결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농업보조금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전주시는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차량·기계 장비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관련 취득세 신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일례로, 총 취득가액이 1억 원인 물건을 농업보조금 5000만 원과 자부담금 5000만 원으로 취득한 경우, 자부담금 5000만 원이 아닌 보조금을 포함한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세요'라는 핵심 메시지와 실제 신고 사례를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농업보조사업 관련 부서와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되며, 시는 법무시협회와 세무시협회 등 세무 관련 유관기관에도 신고 안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구청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된다. 특히 시는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단계에서부터 취득세 신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유산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

김제 벽골제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인 사적 제111호 벽골제는 김제시 무량면 상용대에서 완충대에 걸친 약 8km에 이르는 제방(두 개의 수문 장방제와 경장제 포함)과 1415년 전립원 벽골제 중수비를 포함하여 1968년 1월 21일에 국가사적 제11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국가사적 벽골제와 그 매경인 김제만경들벽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김제시는 1975년 벽골제 부분발굴을 필두로 1980년 유적정화공사, 1980년 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문화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현 벽골제단지에는 벽골제와 농경문화를 대중적으로 전시 및 자료수집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김제를 발원지로 일제강점기를 따른 소설 아리랑의 자료를 전시하는 아리랑문학관, 그리고 전통미술제의 거목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나성목선생의 벽화미술관과 농경사상을 주제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김제 우도농악관 등 문화시설과 각종 야외전시장로 구성돼 있다.

사적 벽골제와 각 박물관들은 오래된 고을, 김제의 지역정체성 및 문화를 대내외에 전명하는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백년지대 김제를 표방하고 있다.

- 출처: 김제시청 홈페이지 -

**김제 벽골제에 조성된 쌍룡 조형물. (김제시청 제공)